

더민주 도당 당직자 전면 물갈이설 '당혹'

총선 패배 책임 마녀사냥식 불만 제기... 신임 도당 위원장 전면 '물갈이' 설에 좌불안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들이 '동네북'이 된 모양새다. 도내 정가 일각에서 신임 도당 위원장이 결정되면 도당 당직자를 전면 '물갈이' 하겠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자리가 추대와 달리 경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 당직자들이 영종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기쁨이나 지난 총선 패배 책임이 당직자들 때문이라는 마녀사냥식 불만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직자들은 이래저래 답답한 표정이다.

또 매년 도당 위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 바뀔까 불안해왔기 때문에 이번 투머에 좌불안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최근 시도당 당직자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번 '칼바람' 설에 맘이 편치만은 않다.

사실 도당 당직자들은 비상근과 달리 급여를 받고 도당 업무를 처리하는 엄연한 근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의 경우만 중앙당 소속으로 정규직이고 조직국장, 총무국장, 홍보국장, 여성국장 등 6명의 당직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무엇보다도 시도당위원장이 인사 전권을 행사하면서 비정규직인 당직자들은 매년 교체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진다. 지지를 받아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당직자 물갈이가 자신을 돕지 않았거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해석돼 쉴새없이 불만을 쏟아내는 지적이 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관계자는 "상근 당직자는 도당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정권교체하려면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해야 하는데 물갈이설이 나오는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음주운전 이철성 인사검증 실패 책임자 우병우"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검증 담당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을 추궁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이 내정자가 지위를 통해 얻은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투기 의혹도 문제이지만 지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었다면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됐다"며 "23년 전 일이라지만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체면이 안 산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내정자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실패한 인사검증"이라며 "우병우 수석이 앞으로도 인사검증을 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개각설이 나오는데 인사검증을 누가 할지 걱정스럽다. 우 수석에게 맡긴다면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국정쇄신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개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뉴스1



사드배치 반대 국민의당 바지민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승용, 정동영 등 비대위원들이 1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 진입로를 찾아 성주군민들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우상호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10만원으로"

"3만원은 13년 전 기준·지금 시점은 5만원선 합당... 시행령 합리적 조정 공식 제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 공무원 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 식단을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식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돼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1

우상호는 "3만원은 13년 전 기준·지금 시점은 5만원선 합당... 시행령 합리적 조정 공식 제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 공무원 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 식단을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식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돼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1

우상호는 "3만원은 13년 전 기준·지금 시점은 5만원선 합당... 시행령 합리적 조정 공식 제안"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2003년도 기준으로 하거나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 공무원 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 식단을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식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돼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1

박남춘, "우병우 아들 복무기간 중 절반만 운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도 상경이 운전복무기간 중 실제로는 절반 가량만 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관공처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200일 동안 우 상경이 실제 운전한 일수는 103일로 나타났다. /뉴스1

새누리, 우선추천 20% 초과 금지

새누리당은 1일 지난 4·13 공천과정에서 보복 공천 논란의 불씨가 된 '우선추천 지역' 문제에 대해 전체 253개 선거구의 총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쿼터제'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대위에서 우선추천지역 제도의 총량을 규제해 전체 253개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영남 등 새누리당 일부 강세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현역 의원들을 속이내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이처럼 우선추천지역 남발 방지를 위한 쿼터제 도입을 결의하면서 우선추천지역에 투입되는 대상 후보 조건은 다소 완화했다.

기존 우선추천지역 공천 대상은 정치적 소수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적 기대부응을 위한 영인"에 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국민공천배심위원단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우선추천지역 제도의 대상 지역 및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공천배심위원단의 적부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이해충돌방지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안명과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했다. 또 공무원 및 공직단체·기관장,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 등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직무수행에 대한 회피 등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 등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 또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다.

안 전 대표 측은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의원을 예외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금지 예외조항(5조2항외3)에 대한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강요상 새누리당이 원이 지난 7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족채용 금지 등 포함 국회의원 부정청탁 금지 예외조항은 수정 안해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패 후진국이냐고 오명을 안고 갈 수 없다"며 "지난해 김영란법 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희, 박주선, 박주현,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태규, 장정숙,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뉴스1

여야 3당 '세월호특조위 연장' 이견에 의사일정 협상 난항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김도읍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도 평소보다 한참 늦은 8월26일에 의결준다는 전제로 7가지나 달고 왔다"며 "조선해운산업 관련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조사기간 연장, 누리과정예산 대책,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6월 말로 끝났다. 그런데 이를 연장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사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수석은 회동 후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협의 중 별도의 국회 특위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자는 기존 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했다"며 "너이성 의사일정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도 "오늘 합의된 것은 없다. 서로 이견이 많았다. 내일쯤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1

최영규, 더민주 도당 원내대변인 선임

전북도의회 최영규(인선)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원내대변인에 선임됐다.

더민주 원내대표인 박재만 의원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지난 총선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대변인으로 선임하게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대변인 선임 배경을 밝혔다.

최영규 의원은 "초선에 원내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어 부담이 크지만, 도민들의 사랑 속에 정권교체의 희망을 찾고,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도내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4.1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정읍고창지역대의원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지역대의원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달 30일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정읍고창지역위원회 하정열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민주의 지역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박우정 고창군수, 유진섭 정읍시장, 최인규 고창군수, 이학수·이호근·장명식 도의원과 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해 뜻을 모았다.

더민주의 당규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상무위원은 총 120명이며 이 중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운영위원 등이 당연직으로 배정됐다.

홍성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정수·강태봉·강길원·김경희·장명희 씨 등 35명이 선출된 상무위원으로 뽑혔다.

또 박성우·주종근·김성영·이남희 씨 등 46명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이 함께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8월27일 열릴 예정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승식·최민철·허재원·이수용·김원욱 당원 등이 모범당원으로 당대표 1급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정열 위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위원회 ▲주민과 당원 누구나 주인과 중심이 돼 운영되는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의 권한을 담원동지들과 나뉘어 의견과 주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위원회 등 세 가지 지역위원회 운영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정읍고창지역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대통령 후보, 시장군수 후보, 지방의원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민주 "전기요금 개편안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와 관련, "우리 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려 시민들은 '요금폭탄'이 두려워 밥집을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와중에 한국전력은 작년 한해 10조 원의 당기순 이익을 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고 헌정을 비난했다. /뉴스1

더민주 의원들 내일 성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3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를 찾는다. 이번 방문은 당 사드대책위 소속 김현권 의원의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도부는 동행하지 않는다.

1일 김현권 더민주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을 비롯한 이상민, 안민석,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의원은 3일 경북 성주를 방문, 사드배치대책위를 비롯한 성주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산포대를 찾아 국방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같은 날 성주군청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 소속 의원들의 성주 방문은 국민의당에 이은 두 번째다. 하지만 일제침략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지도부가 모두 성주로 출동했던 국민의당과는 달리, 더민주 당 지도부 차원이 아닌 당 사드대책위원인 김현권 의원의 주도로 신청자를 모아 성주를 방문하게 됐다. /뉴스1